

# 靑 홍종학 임명강행 의지...예산국회 ‘냉각’

### 이르면 내일 예정...헌재소장 청문회 등 난항 불가피

### 靑, 새 정부수석 인선 고심...강기정·최재성 등 하마평

청와대가 이르면 오는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예산국회의 파행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중기부가 신설 부처여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업무 조율에 효율성이 크고 내각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홍 후보자가 불만을 저지른 게 없다는 점을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야권의 강력 반발 등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야권은 홍 후보자가 장모의 재산을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눈 가리기식’의 절세도 문제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이자 지급 문제와 증명 자료를 밝히지 않은 것은 목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이어 이번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5번째 사례가 된다.

홍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오는 22일 진행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은 법정시한(12월 2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진성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데다 2012년 청문회 때도 별다른 신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서 야당이 홍 후보자 임명 문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야당이 전면적인 보이콧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병헌 전 대통령 정부수석 비서관이 20일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 전 수석을 불러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낸 당시 롯데홀쇼핑 등 기업들의 후원 관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새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수

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부수석의 후임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임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번 주 내에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의 강기정 전 의원을 비롯해 오영식·최재성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강기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공약한 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성곤, 정정선 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청와대에 수습의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각각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재소환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 설치 입법 절차 본격화

### 내일 4건 심사...처리 속도따라 개혁 작업 ‘동력’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국회 입법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19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 전·현직 감사의 비위 사건과 검찰의 권한 집중 및 과도한 행사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 등으로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압도한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 작업의 동력도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규모 등 의견을 달리고 있어 복잡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재 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권리당원 150만명 돌파

### 5개월만에 126만명 늘어...호남·충청·영남·강원 입당 열풍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당비 납부를 약정한 권리당원 입당자 수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전국 시도당위원회에서는 9월 말까지 접수된 권리당원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한 달여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달 중순, 전국 권리당원 수가 100만명이 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시도당위원회의 미취합 데이터까지 확보해 총합산한 결과 권리당원 수가 150만명을 상회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민주당이 ‘100만 당원운동’에 착수한 지난 6월초(24만명)에 비하면 무려 126만명이 늘어났다.

당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충청과 영남, 강원지역에서도 입당 열풍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이 같은 당원 급증세를 공천 경선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각자 지지자들의 권리당원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자발적인 입당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원 15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당원 배지와 당원증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정률 40%... 지지부진 ‘예산안 심사’

### 내달 2일 시한...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등 줄줄이 대기

### 한국당 “포퓰리즘” 반발... 국민의당 SOC 증액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건 적폐정산을 둘러싼 공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제기되는 우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휴일인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여야 간 공방이 끊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휴일에도 심사를 이어간 것이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 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선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예산안이 48분 늦게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

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3시간 57분 늦게 지연 통과됐다.

올해 역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의 ‘심사대’에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예산들이지만, 일부 야당은 이를 ‘피조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확대론’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버리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변수다. /김형호기자 khh@

# 국회의원 8급 비서 1명 증원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2명(5

급 상당),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 인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어난다. 애초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소 부담이 되고 상황 요건과 자격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법안에서 빠졌다.

운영위는 또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미래연구원법 등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順天朴氏 參議公派 宗中 時祭日

順天朴氏 參議公 宗中員들께서는 바쁜 渦中이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參席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日時** 陰曆 十月 十五日(陽曆 十二月 二日)

**場所** 參議公 祭室(定期總會)

**案件** • 新北面 龍山里 山 二十一番地 (太陽光 事業件)  
• 墓地管理精華事業件

會長 朴 相 繪 010-9601-5000